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5. 4. 7.
No. 1008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심교언
www.krihs.re.kr

이 브리프는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든 생분해성 펄프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방설아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김익희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장
안예현 연구위원
정유진 연구원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주요 내용

- ①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의 격상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정책이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개발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② 아세안 도시 공무원 78명을 대상으로 개발 우선순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9%가 물리적 인프라·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며, 문화유산·관광, 주택, 교통인프라 순으로 개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아세안 도시들은 한국 스마트시티 비교우위 분야로 도시 인프라와 안전·안보 분야를 지목하고, 스마트시티 계획역량 및 ICT 기술 강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
- ③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실제 해외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추진
- 민간기업 83%가 시장진출 도입 단계(1단계)를 경험했으나, 파일럿 단계(2단계) 실증사업 이행기업은 50%로 감소했고, 실용화 및 확산 단계(3단계) 경험 기업은 30%로 축소
- 스마트시티 민간기업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제도가 부처별로 독립적·비연속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진출 단계에 따라 제도의 효과적·효율적 활용이 어려움

정책방안

- ① 아세안 특화 스마트시티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입체적 구성, 현장 기반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정책과제 제안
- ②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아세안 스마트시티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중심의 아세안 특화 프로그램인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신설
- 국내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을 참고해 우리 민간기업 중심의 도시문제 해결형 공모사업 추진
- ③ (해외진출 지원 사다리 제도 도입)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과정에서 진입 한계를 극복하고 실용화 및 확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 ④ (거점국가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아세안 거점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현지 네트워크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조직 구축

01.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에 관한 수요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필요성

우리 정부는 2023년 4월 아세안과 호혜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하였고, 2024년 10월에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최고 협력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

- KASI 8대 중점 추진과제 중 5번은 한-아세안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미래분야 협력 확대, 디지털 등 미래산업분야 협력 추진에 스마트시티 협력과제 포함
- 스마트시티 개발은 단순한 경제적 교류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도시화와 도시문제 대응,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 연계하여 아세안의 공동이행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고 민간 진출의 수요가 높은 분야로 상생적 국익 창출이 가능한 바, KASI 이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스마트시티 주제 중심의 대표적 협력 프로그램 발굴이 중요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개발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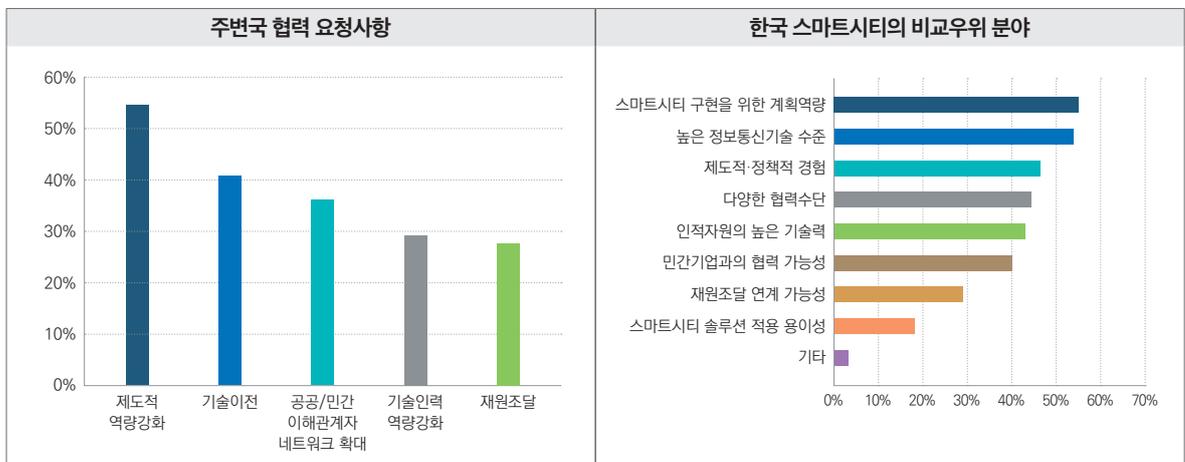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과 민간참여) 아세안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목표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ASUS)을 수립하였고, 스마트시티 개발을 통해 도시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

- 2018년 수립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는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촉진, 민간의 자원조달 확보, 주변 국가로부터 자금과 지원 확보를 목표로, 2024년 기준 31개 시범도시를 지정해 국제사회의 참여를 촉구
- 특히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민간참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민간부문을 디지털 솔루션 기술과 파트너십, 자원조달을 위한 핵심적 이해관계자로 평가

(아세안 스마트시티 공무원 설문조사) 아세안 도시에 필요한 스마트시티 기술수준과 협력 요청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의 도시 및 스마트시티 정책실무자 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응답자의 35.9%가 물리적 인프라·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며, 문화유산·관광, 주택, 교통인프라 순으로 개발수요가 높았음
-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는 제도적 역량, 기술이전, 공공·민간부문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확대 순으로 나타남. 특히 한국은 스마트시티 계획역량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있는것으로 평가하며, 도시인프라와 안전·안보분야의 협력을 요청(<그림 1> 참조)

그림 1 아세안 스마트시티 정책실무자 설문조사 결과



02. 정부차원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참여현황

우리나라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현황

우리 정부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에서 민간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세안 지역에 특화되거나 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는 부족

- (정책 및 계획)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확산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아세안 지역에 특화된 이니셔티브나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음
- (거버넌스) 스마트시티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관련사업 추진과 민간진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고, 해외진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유관기관 협의회도 있으나 부처 간 조정기능은 부족
- (지원제도) 해외진출 지원제도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로드쇼, 시장개척 지원, 전시회 참가 등이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타당성 조사, 계획 또는 실증, 시범사업 등이 있음
- (K-City Network, KCN) 국토교통부의 국제공모 프로그램인 KCN은 2020년부터 4년간 총 49건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45%인 17건(도시계획형은 8건, 솔루션 계획 5건, 실증형 4건)이 아세안 도시에서 추진(국토교통부 외 2024)
- (공적개발원조, ODA) 교통, 환경, 재해관리, 주거, 문화유산 보존, 에너지 등 분야별로 개별적인 프로젝트형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정책컨설팅 사업도 지원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정책과 지원사업이 있으나 △아세안 중심성 부족, △협력거버넌스의 분절적 추진, △민간기업 중심의 제도운영 미흡, △국가 및 도시협력에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민간기업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진출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확대방향

일본, 호주, 중국, 미국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지원사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을 <표 1>과 같이 제안

- 아세안 지역 특화방안 도입, 다부처 협력관리를 위한 총괄기능 강화, 지원제도의 민간기업 활용성 제고, 중점지역에 대한 차별적 협력전략 수립 등

표 1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확대방향

구분	해외 국가 시사점	정책개선 방향
아세안 중심성 부족	• 아세안 스마트시티를 위한 특화된 이니셔티브, 자원,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아세안, 다자기구와 공동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	• 해외 스마트시티 지원정책 중 지역 특화방안을 도입하여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협력 거버넌스의 분절적 추진	• 범정부 협력방식으로 추진되지만,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조직)가 있음 • 이니셔티브를 통해 발굴된 기획안을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의 재원을 연계 활용	• 다부처 협력 관리를 위한 총괄조정 기관을 지정하고 권한과 자원, 역할을 명확히 함 • 부처 간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
민간기업 중심의 제도운영 미흡	• 자국의 민간기업과 아세안 도시의 현지 교류 촉진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킹 및 행사 등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 민간기업 중심으로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제공
국가 및 도시 협력에서 전략적 접근 부족	• 협력 우선순위 도시를 구분하여, 실증사업 추진 및 역량강화 수준을 배분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정책 추진	• 민간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고 협력의지가 높은 중점지원 도시 선정 • 중점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차별적인 협력방식 적용

03. 민간기업의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참여현황 진단

민간기업 해외 진출현황 파악의 한계와 대안 모색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의 업종분류가 불명확하고 민간의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이행 실적이 통계화되지 않아, 민간기업의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참여현황 진단과 기업진출의 장애요인 파악이 어려움

- 2023년 스마트도시협회가 실시한 협회 회원사 및 융합얼라이언스 기업대상 설문조사에서 858개 기업 중 40개 기업(5%)이 '해외사업 경험 보유'로 응답(이미경 2024). 그러나 응답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 세부 정보와 진출 수준 파악이 불가

따라서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수준 진단과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3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해외진출 수준과 각 단계별 문제점, 민간 그룹별 정책수요를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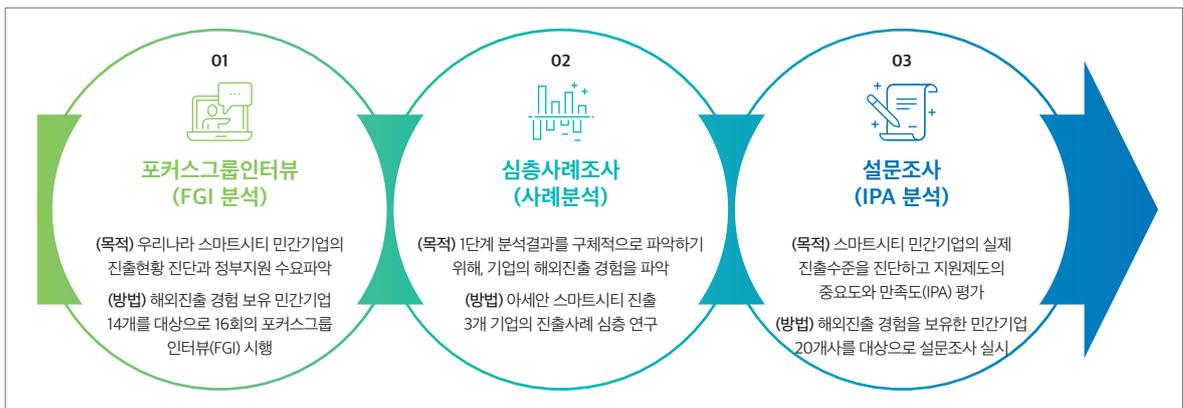
- 국토교통부의 해외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인 K-City 네트워크의 개발유형과 민간기업의 규모에 따라 <표 2>와 같이 네 개의 민간 참여기관과 공기업·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지원기관 그룹을 구분하여, 각 그룹별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실태와 특징 조사

표 2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민간기업 분류

구분	민간 참여기관		지원기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기업·공공기관
스마트시티 도시계획·개발형	A	B	E
스마트시티 서비스·솔루션형	C	D	

- (민간기업 진출현황 분석방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그림 2>와 같이 3단계 분석을 하여 민간기업 그룹별 진출 현황,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수준, 정부지원제도 개선 사항과 정책수요를 도출

그림 2 스마트시티 민간기업 해외진출 현황 분석방법



스마트시티 민간기업 해외진출 현황분석 결과

[분석 1단계: 스마트시티 민간기업 포커스그룹 인터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예산 확대와 실증사업 이후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스마트시티 정부지원제도의 중요성을 파악

- (A그룹: 대기업/도시계획·개발형) 정부지원 스마트시티 사업참여를 통해 해외에서 기업공신력 확보와 기업본사의 사업추진 지지를 확보하고자 함. 인허가 및 이행 단계에 우리 정부의 참여를 통한 상대 정부와 협상력 강화를 희망하며,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해외사업의 보증·보험제도 지원강화 요구
- (B그룹: 중소기업/도시계획·개발형) 시범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의 초기 단계에 머문 기업이 다수이며, 아세안지역 진출 수요가 높고, 현지 네트워크 확보와 시범사업 재원 확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

- (C그룹: 대기업/서비스·솔루션형) IT기반 통합플랫폼 구축과 친환경·탄소감축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스마트 기술의 해외확산을 지향.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진출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이나 인센티브 필요성 제기
- (D그룹: 중소기업/서비스·솔루션형)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 수요가 높고, 현지 수준에 맞춰 저비용 기술수준으로의 전환 및 현지 시장성 검토를 위해 초기 단계의 실증사업 추진 중. 지속적 유지보수와 확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형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확대 요구

[분석 2단계: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진출 심층 사례조사] 아세안 도시에 스마트 가로등, E-모빌리티, 스마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세 개의 민간기업 사업추진 사례를 심층분석함으로써,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별 세부 활동과 주요 시사점을 파악

-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단계) 도입 단계, 파일럿 단계, 실용화 및 확산 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별 세부 추진과정과 활동을 정리하여 <표 3>과 같이 총 12단계의 추진 절차와 23개 활동으로 요약
- (시사점) 아세안 도시가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문제에 집중된 서비스 개발을 강화해야 하며, 도시정부 등 현지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및 세미나가 중요하고, 도입 및 파일럿 단계 초기 투입에 있어 정부지원 필요

표 3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단계별 추진활동

추진 단계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활동
A 도입 단계 (1단계)	A1. 시장 탐색	• 해외 국가(지역) 검토
	A2. 시장 선정	• 대상 국가(도시) 선정
	A3. 시장 분석 및 전략 수립	• 대상 국가(도시) 시장 분석 및 진출전략 수립 • 사업모델(기술)의 현지화 테스트
	A4. 현지화 여건 조성	• 현지 법인 설립 또는 현지 기업 파트너십 구축 • 현지 정부기관/민간기업 네트워킹 • 기업 및 기술 홍보
B. 파일럿 단계 (2단계)	B1. 실증사업 발굴	• 실증사업(PoC) 사업모델(기술) 개발 • 현지 기관(도시) 수요 확인 및 협약 • 실증사업 형성(공모 지원 등) 및 자원 마련
	B2. 실증사업 실시	• 실증사업(PoC) 수행 및 완료
	B3. 실증사업 평가 및 환류	• 성과 측정 및 평가/환류 • 현지화 전략 점검 및 사업모델(기술) 수정
	B4. 실증사업 성과 홍보	• 현지 정부기관/민간기업 네트워크 확대와 성과 공유 • 실증사업(PoC)의 결과 및 성과 홍보(국내/현지) • 사업모델(기술) 상품화 및 마케팅
C. 실용화 및 확산 단계 (3단계)	C1. 신규 사업 발굴 및 실시	• 실용화 사업모델(기술) 개발 • 신규 사업 형성(PPP, 입찰, 투자개발 등) 및 자원 마련
	C2. 시장 진출 안정화	• N차 사업으로 확대 • 사업모델(기술)의 성능개선 노력
	C3. 사업 패키지 확대 및 거점화	• 사업모델(기술) 패키지 확대 • 거점 도시(시장) 확보
	C4. 인접 도시 및 국가 진출 확산	• 유사 성격 시장으로의 신규 진출

[분석 3단계: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중요도-만족도 조사]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진출 단계 모형에 따라, 21개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수준을 측정하고, 진출 단계별 정부지원제도의 중요도-만족도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정부제도의 활용 수준과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진출 희망국가) 모든 응답 기업이 아세안을 진출 우선순위 국가로 선택하였고,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70% 이상 높은 선호를 보임
- (민간기업의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수준) 83% 기업이 1단계 도입 단계를 경험하였고, 55%의 기업이 2단계 파일럿 단계를 경험함. 그러나 3단계 실용화 확산 단계에 진출 경험이 30%로 감소하여, 해외진출 단계가 올라갈수록 민간의 실제 참여 수준은 감소(<표 4> 참조)

표 4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단계별 경험 유무

해외 진출 단계		경험 있음	비율(%)	
A. 도입 단계 (1단계)	A1. 시장 탐색	16	80	83
	A2. 시장 선정	16	80	
	A3. 시장 분석 및 전략 수립	19	95	
	A4. 현지화 여건 조성	15	75	
B. 파일럿 단계 (2단계)	B1. 실증사업 발굴	17	85	55
	B2. 실증사업 실시	10	50	
	B3. 실증사업 평가 및 환류	8	40	
	B4. 실증사업 성과 홍보	9	45	
C. 실용화 및 확산 단계 (3단계)	C1. 신규 사업 발굴 및 실시	10	50	30
	C2. 시장 진출 안정화	4	20	
	C3. 사업 패키지 확대 및 거점화	5	25	
	C4. 인접 도시 및 국가 진출 확산	5	25	

• (정부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20개 스마트시티 민간기업 진출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의 응답비율이 40.8%이고, ‘지원받음’은 13.8%임.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지원제도 인지대비 활용 수준이 저조하고, 지원조건 제약, 지원대상 업종제한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률이 낮아짐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정책수요

민간기업 해외진출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정부 정책의 지원 요구사항 정리

- (지원제도) 실증사업 이후 후속 단계의 지원 강화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통합적 패키지 구성
-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도시계획과 서비스 솔루션의 결합,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동반참여 패키지형 사업 등, 분야와 업종을 초월한 전략적 융합모델 개발
- (지원거버넌스) 해외정부 및 민간대상 협상력 강화와 인허가 진행,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 및 공공의 현지기반 지원 강화

표 5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아세안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요 조사결과

구분	민간기업 수요	개선방안	
지원 제도	민간의 해외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의 후속 단계 진입 장애요인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필요 • 특히 파일럿 단계에서 정제된 활동을 지원하는 집중 지원사업 필요	• 파일럿 실증사업 실시 이후, 확산 가능 사업에 대해 후속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방안 연계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패키지 구성	• 정부지원 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되어 통합적인 안내가 부족하고 민간이 개별적 지원을 시도하는 번거로움 발생 •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 단계별 필요한 범부처 지원제도를 모아 ‘스마트시티 지원제도 패키지’ 구성
지원 사업	F/S 지원 강화	• 시장진출 및 사업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 타당성 검토의 정부지원 강화 필요 • 현재 F/S 지원제도는 자격조건이 제한되어 참여 문턱이 높음	•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을 위한 F/S 지원제도 별도 구성
	대기업 동반진출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스마트시티 진출을 위한 동반 진출을 선호하나, 현실에서 추진 한계 • 동반 진출을 통한 시너지 확산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융합 그룹을 형성하고, 해외진출에 동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공
	전략적 진출 국가 선정	• 정부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중점국가 선정에 있어 스마트시티 민간기업 유형별·규모별 선호에 맞춘 전략 필요	• 스마트시티 지원을 위한 전략국가·도시 선정 시, 기업 특성과 선호에 맞는 국가와 사업 선정기준 필요
	도시개발형과 솔루션형의 융합	• 스마트시티 유형이 분리되어 있고, 관리 기관이 나뉘어 있음 • 스마트시티 기업 간·사업 간 연계효과와 시너지 창출 어려움	• 두 유형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융합형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
지원 거버넌스	현지 네트워크 구축	• 현지 네트워크 관계의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 관계와 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별적 접근 필요 • 특히 현지 정부기관 대상의 관계에서 우리 정부·공공기관의 협상력 강화 필요	• 현지 정부 대상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 및 현지파견 인력 지원 • 현지 네트워킹이 발생하는 단계, 대상에 따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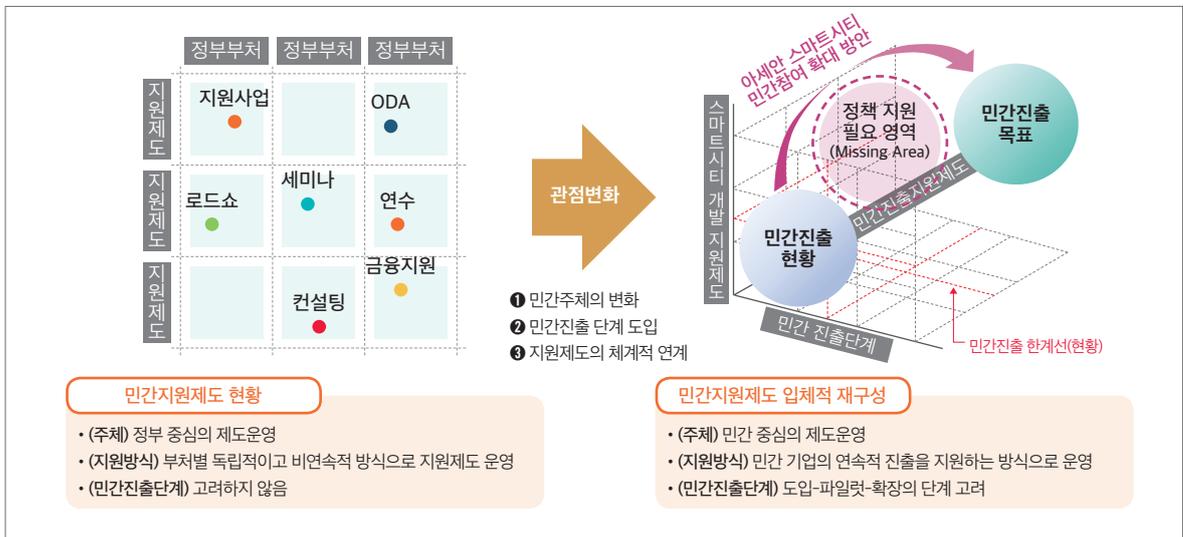
04.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정부 부처별로 평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진출 단계에 맞추어 입체적 지원방식으로 재구성

- 현행 제도는 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독립적이고 비연속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의 해외진출 단계별 상승효과를 위한 맞춤형 고려는 부족한 실정
-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민간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입-파일럿-확장의 단계적·연속적 진출 지원을 위하여 기존 제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
- 스마트시티 개발 지원제도, 민간진출 단계, 민간진출 지원제도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입체모형에서 민간진출 현황과 민간진출 목표 사이의 누락영역(missing area)을 채우는 정책방안 제안

그림 3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입체적 재구성



우리 민간기업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참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 아세안 지역특화와 우리의 비교우위 집중을 고려해 '아세안 특화 스마트시티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
-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관련 계획과 제도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입체적 재구성' 추구
- 민간기업 중심의 스마트시티 협력 추진을 고려해 '현장기반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지원 거버넌스' 구축

그림 4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와 이행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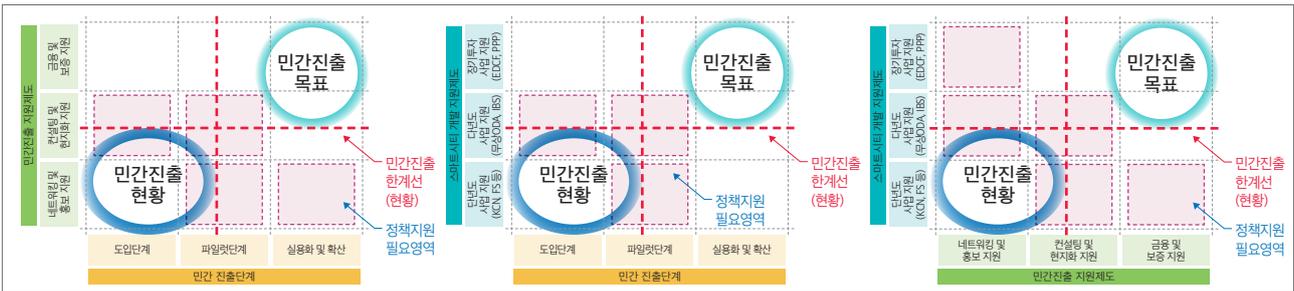
①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기획: 아세안 스마트시티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중심의 아세안 특화 프로그램인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을 신설

-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 추진 경험을 참고하여 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특화 프로그램 제안
- 1차 파일럿 사업 추진 후, 성과가 입증된 사업에 대해 2차 본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확대기반 마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참여형 공모사업으로 기획하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현지화를 유도
- 도시계획과 스마트 솔루션의 융합적 접근으로 현지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성공사례 홍보를 통해 주변도시로 사업기회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

② 해외진출 지원 사다리 제도 도입: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이 파일럿 단계 진출 이후 모델 수정과 시장화 과정에서 한계를 극복하고 실용화 및 확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그림 5> 분홍색 영역) 강화

- 민간진출 단계, 스마트시티 개발 지원제도, 민간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세 개의 축으로 구분하여 민간진출 한계선을 파악하고, 상위단계 도약을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파악
- 맞춤형 컨설팅과 현지화 지원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파일럿 단계 이후에도 해외진출의 다음단계 연계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또한 우수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해 단년도 실증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확장하거나 ODA와 연계 시도
- 스마트시티 정부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민간기업별 진행 단계와 요구 조건에 맞는 제도 지원방안을 컨설팅하는 '스마트시티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

그림 5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개선방향



③ 거점국가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 및 활용: 아세안 거점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해 현지 네트워크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현지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

- 국토교통 ODA로 지원하거나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활용하여 현지 거점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진출 수요가 높은 전략도시를 선정하여 현지 지원활동 강화
- 현지 고위급·실무급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기업이 진출 초기부터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지원센터와 해외거점센터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현지 상황에 맞춘 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KIND-KAIA. 2024.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2020-2024 성과보고.
이미경. 2024. 스마트도시협회 전문가 세미나.

- **방설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sab@krihs.re.kr, 044-960-0271)
- **김민지**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문연구원(minjeek08@krihs.re.kr, 044-960-0552)
- **김익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장(kimikhoi@krihs.re.kr, 044-960-0210)
- **안예현**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anyehyun@krihs.re.kr, 044-960-0546)
- **정유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yjjoung@krihs.re.kr, 044-960-0592)

※ 이 브리프는 '방설아, 김민지, 김익희, 안예현, 정유진. 2024.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